

# 새로운 기후 거버넌스 만들기 캠페인, 이렇게 참여하세요!

## '기후시민의회 도입' 공약 촉구하기!



6·3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기후시민의회 도입과  
조례 제정 공약을 촉구하세요.

- 촉구하기 캠페인 참여: <https://campaign.do/go.CCA>
- 후보자에게 정책 요구 보내기
- 응답 확인하기



## 인증샷으로 함께 외치기

인증샷 배경을 다운받거나,  
자유롭게 만들어서  
사진 찍어 SNS에 업로드해 주세요.

- 배경 다운로드: <https://campaign.do/CCA인증샷>

#기후시민의회  
#기후시민의회정책요구  
#기후거버넌스  
#기후시민의회만드는시민주권

## 행동으로 요구하기

후보자에게 질의하기, 정책협약맺기,  
기자회견 등 다양한 형식으로  
지역에서 직접 목소리내고,  
그 활동을 함께 나눠요.



# 지금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!

## 지역 기후시민의회 공동실천단 기후정치의 주인공으로

'지역 기후시민의회 공동실천단'은 지방선거를 계기로  
시민의 손으로 지역 기후 거버넌스를 다시 짜기위한  
느슨하지만 지속적인 시민 실천 네트워크입니다.

-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'기후시민의회' 제도화와 기후거버넌스 개편을 공약으로 약속할 것을 촉구합니다.
- 기후시민의회가 무엇인지, 왜 필요한지,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함께 공부합니다.
- 기후시민의회 기획 실행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실제 제도와 조례를 바꾸는 후속행동에 참여합니다.



## '지역 기후시민의회 공동실천단' 함께하기

신청서 작성: <https://campaign.do/act.CCA>

문의: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

02-6404-8440

mail@ecpi.or.kr



기후정책,  
시민의 결정으로

기후시민의회로

시민주권을

찾읍시다!



## 기후의제, 이제는 '진짜 정책'으로

기후위기는 에너지, 일자리, 주거, 건강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. 하지만 지금, 우리 지역의 기후정책은 누구에 의해 결정되고 있을까요?

## 닫힌 결정에서 시민의 결정으로

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길은 누군가는 더 많이 책임지고, 누군가는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과정입니다. 그래서 기후정의란, 모든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책임과 부담,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입니다. 그러나 지금의 정책 결정은 여전히 시민을 배제하고 있습니다.

## 기후정의에 열린 사회를 위한 첫걸음, 기후시민의회

### ✓ 갈등을 넘는 공론과 합의의 장

시민과 이해당사자가 함께 배우고 토론하며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.

### ✓ 선거를 넘어서는 책임 정치

미래세대와 중장기 탄소중립 경로까지 시민의 이름으로 논의합니다.

### ✓ 실행되는 정책

시민이 만든 결정은 '검토 대상'이 아니라 이행해야 할 약속이 됩니다.



# “ 우리의 요구: 지역 기후 거버넌스 판갈이 ”

기후위기를 해결하려면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결정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.

## 기후시민의회 제도와 '자문기구'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로

### ✓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.

- 시민이 참여하는 속의 구조의 제도화
-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운영과 행정지원
- 일반시민(추천) +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 보장
- 논의 결과 공개와 공식 반영
-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

### ✓ 더 확장해야 합니다

- 노동자·농민 등 다양한 주체 참여 보장
- 마을과 공동체 단위로 확산



## 기후시민의회란 무엇인가요?

- 평범한 시민과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기후정책을 결정하는 '숙의민주주의' 모델
- 성별, 연령, 직업, 지역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구성된 시민들이 학습하고 토론하여, 우리 지역의 기후 정책과 실행방안을 결정하는 기구

## 6·3 지방선거, 왜 '기후시민의회'가 중요한가요?

지방정부는 기후정책을 실행하는 중요한 주체 중 하나입니다. 하지만 지금까지 시민 참여 없이 계획이 만들어졌고 거버넌스는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.

- 지금이 결정적인 이유 = 2027년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제2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.
- 지방정부와 의회의 성원을 뽑는 지방선거 = 지역 '기후시민의회' 제도화와 '기후위기대응위원회' 개편을 위한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.

## 기후위기대응위원회(탄소중립위원회) 개편 대표성 + 시민과 이해당사자 참여 확장

### ✓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.

- 시민사회·노동·농민·청년 참여 확대
- 다양성과 대표성을 갖춘 구조로 전환
- 민간 위촉위원 비율 70% 이상
- 특정 성별 60% 초과 금지
- 청년 참여 10% 이상 보장
- 공개모집 확대(10% 이상)

### ✓ 꼭 필요한 변화

- 산업전환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별도 구성
- 조례 개정을 통해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
- 탄소중립기본조례 전면 개정 필요

슬기로운 기후시민들의 기후시민의회 만들기  
기후정책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.

